

## 행정학 박사

남 정 집 (EBS 대표강사, 희소메가스터디 , 춘추관행정고시학원)

2006년 시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2006.4.8)

시험 강평

1. 예측이 가능했던 참여정부의 개혁과 관련한 개정 법률에서 다수 출제 되었다
    - ① 개정된 법률은 새벽특강, 모의고사에서 전반적으로 출제한다(이유는 다른 강의와 차별화가 필요하니)
    - ② 노동조합, 부패방지법, 지방교부세,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제도
  2. 기존의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되었다
    - ① 뉴거버넌스이론, 변혁적 리더십, 리플리와 프랭클린(Rifley-Franklin), 정책평가의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전자정부, 정책집행자의 유형, 지방교부세 등
  3. 최근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 되었다
    - ① 작은정부론, 대통령과 국민과의 토론
  4. 행정학적인 감각을 묻는 지문이 출제되었다
    - ① 정책모형과 관련한 문제
  5. 이슈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① 감축관리 방법
- 홈페이지참조 [www// namjj.co.kr](http://www.namjj.co.kr)

[문 1] 다음 중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조직과 정원의 정비
- ② 목표관리제의 도입
- ③ 일몰제의 도입
- ④ 사업시행의 보류

정답 (잠정) ②.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이다. ③과 ④는 분명하지만 ①은 조직과 정원의 정비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정한 감축관리란 기구축소나 예산절약이 아니라 조직전체성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반면, 조직의 존속 당위성을 장기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에 실패한 조직과 사업은 폐지한다면 이는 감축관리에 해당한다. 목표관리제(MBO)는 PPBS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두한 결과,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기법을 말한다. 최근 우리정부는 MBO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4급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평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오석홍, 행정학 p1012 ; [츨행정학개론 p.1035](#) )

01.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2003, 행정고시)

- ① 생산성과 조직의 효과성 추구
- ② 예산적자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제기
- ③ 생산품과 서비스의 결과 중시
- ④ 미국 연방정부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목표
- ⑤ 인적자원의 자질향상

정답 ④ (츨행정학 p.1036 ;1번 문제)

[문 2] 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역차별 문제의 해소      ② 관료제의 민주화
- ③ 관료의 책임성 제고      ④ 정책의 형평성 제고 정답

정답 ①. 핵심은 수직적 형평성(결과의 균등)을 달성하다보니 오히려 수평적 공평(기회균등, 실적제)을 저해함으로써 역차별을 초래한다 (츨행정학개론 p. 690. 4번문제)

[문 3]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 ② 지방세의 경우 국제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 ③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정답 ④. 이 문제는 예측이 가능한 문제이다,

①번과 ②번 설명(츨행정학개론P.1117)

국세	지방세
소득과세 (원천징수 3,3 %)국세가3%,지방세가 0.3%. 여러분들 월급을 예로 들었음)	재산과세 (요즘 자치단체간의 재산세인하율 경쟁이나 취득세, 등록세 인하율 조정안 등)
순수공공재적 성격강함	순수공공재적 성격 약함,
응능성(응량성): 능력별 과세	응익성 : 수익자부담원칙 (앗 응애예요 연상)

③번 지방재정자립도의 문제점으로는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와는 무관하여 재정자립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재정규모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재정규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것도 아니다.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만 고려할 뿐, 그 세출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③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의 효과를 역산하는 모순을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만큼 재정력은 강화되는데 반하여,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어 모순이 있다(츨행정학개론 p.1118) ④는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개정(2006.1.1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되어 19.13%에서 19.24%로 상향조정. 본 강사가 시험당일 서초중학교, 서초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직접 수험생들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츨행정학개론 p.1114)

<분권교부세>

1.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

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분권교부세의 배분 방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① 분권교부세의 신설

- ㉠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려는 것임.
- ㉡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외에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함.
- ㉢ 분권교부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양된 종전의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② 지방교부세의 자원 확대

- ㉠ 분권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려는 것임.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므로써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에 통합하여 내국세 총액의 19.13%로 상향조정함.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신설되어 19.24%로 상향조정)

### ③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방법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 ㉠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가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 분권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내역을 통지하도록 함.
- ㉡ 분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방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분권교부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④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명시
  - ㉢ 분권교부세의 취지상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만 운영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 ㉣ 분권교부세는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하도록 함

[문 4]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을 중시한다.
- ②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정책, 기업, 대통령, 정당, 시민단체, 제3섹터, 민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③ 시민단체, 제3섹터 또는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④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정답 ①. 케인즈(Keynes, 1930-1970,진보주의, 거대정부, 정부실패) -하이에크(Hayek,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부실패 처방, 작은정부)-피터(Peters, 1990년대, 정부-시장-NGO 관계중시)  
 ①은 전통적 관료제로서 교환관계는(변혁적 리더십상대이론인 거래적 리더십),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고객)중심이론이다(총행정학개론 p.239, 63, 70번 문제)

[문 5]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추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추종자에게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적 자극을 부여한다.  
 -추종자에게 도덕적 목표와 임무,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 ① 발전적 리더십(developmental leadership)
- ②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 ③ 촉매적 리더십(catalytic leadership)
- ④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정답 ②. 다수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이다.(2002.행정자치부9급, 2005.국회사무처8급, 2000.사법시험)  
 거래적 리더십과 상대되는 이론으로서 최고관리자에게 요구된다(강의 때 강조했던 각 정당의 대표자들을 연상해보자, 모자, 노란잠바, 삼보일배) (총행정학개론 p.619. 20번문제)

[문 6]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 ① 오염요인

- ② 도구요인
- ③ 상실요인
- ④ 선정요인

정답 ④ 내적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하여 묻는 지문이다

- ① 모방효과(오염요인) : 통제집단의 구성원이 실험집단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는 오류이다
- ② 측정도구의 변화(도구요인) : 이는 정책실시 전과 실시 후에 사용되는 효과의 측정방법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철강 제품의 생산량을 측정할 때, 처음에는 무게로 측정하다가 나중에는 생산한 개수로 측정하는 경우이다
- ③ 상실효과 :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탈락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이다.
- ④ 선정효과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선정상의 오류이다.(총행정학개론 p.337 ; 382, 51번 문제)

[문 7]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 것은?

ㄱ.수입대체경비 ㄴ.이용 ㄷ.명시이월 ㄹ.계속비 ㅁ.이체  
 ㅂ.국고채무부담행위 ㅅ.사고이월 ㅇ.전용 ㅈ.예비비

- ① ㄱ, ㄴ, ㅅ, ㅇ                      ② ㄱ, ㄷ, ㅁ, ㅈ
- ③ ㄴ, ㄷ, ㄹ, ㅂ                      ④ ㄹ, ㅁ, ㅂ, ㅅ

정답 ③ 이문제의 핵심은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를 묻는 지문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로는 수입대체경비(예산의 특례),이체는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예산책임소관의 변경의 주체로서 이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할 때는 사전의결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고이월은 사전의결원칙의 예외, 전용은 세항과 목간 상호융통으로 사전의결원칙예외, 예비비는 설치시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만 지출후에는 사후승인을 요한다(2003, 입법고시, 1998, 서울시7급) (총행정학개론 p. 892 ; 15, 29번 문제)

문 3.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04 행시)(총행정학개론 p. 909 16번 문제)

- ① 가예산
- ② 명시이월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 ④ 정부투자기관예산
- 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정답 ④

[문 8] 관료제 병리현상의 하나인 ‘목표의 대치(displace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표의 대치’ 현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성향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② 행정개혁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직이 축소·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료들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목표의 대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③ 머튼(Robert K. Merton)은 조직이 과도한 형식주의로 흘러 절차나 규칙자체를 목표로 삼는 현상을 과잉동조(overconformity)라고 하였다.

④ '목표의 대치' 현상은 조직 전체적인 문제나 외부환경의 변화 보다는 조직 내부 문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답 ①. (1) M. Weber의 '관료제(1901)'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당시 정치·경제적 현실을 토대로 프러시아 관료제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연구된 가설적인 모형이다.

(2) Weber는 관료제의 순기능적 측면을 연구하였다.(츨행정학개론 p.252 ; 491)

[문 9]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정답 ② 참여정부의 개혁내용을 묻는 지문으로서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①주민투표와 국민투표는 선거연령이 20세이다. ② 시도지사가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수 있다.(츨행정학개론, p.1063, 홈페이지)

[문 10] 정책 집행상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 ②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 ③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다.
-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답 ④. 빈번하게 출제되는 기출문제이다. (츨행정학개론 p.275 1번문제)

[문 11]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국회 전문위원
-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④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정답 ③. 정답 ③.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①②④는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에 해당한다. ③은 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판사, 검사) 해당한다. ④는 YS정부에서는 차관급이었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1급 별정직으로 하향직급 조정되었다. 각종 비리와 연루된 사건을 상기해보면 된다고 수차 강의때 강조했던 내용이다.(츨행정학개론 p.702)

## 헌법재판소법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현재 24인의 헌법연구관과 5인의 헌법연구관보가 재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9인의 판사가 법원에서, 5인의 검사가 검찰청에서, 1인이 법제처에서 파견나와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 감사원법

제17조 (직원)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2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①사무총장·사무차장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5급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제19조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문 12] '작은 정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자유주의사상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 ② 고비용구조의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에 대한 요청 등에 의해 등장하였다.
- ③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이 포함되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정답 ③. 최근 국민과의 토론, 모일간지와 기획예산처간의 작은정부나 큰 정부냐와 관련하여 출제된 시사적인 문제이다. ①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작은정부 ②는 저비용, 고효율성을 강조하는 행정개혁, ③은 작은정부란 공식적인 공무원 수, 예산,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부와의 규제나 공기업, 제3섹타까지 포괄하는것이 보편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형의 요소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는 큰 정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총행정학개론 p.1051 34번 문제)

④는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관련한 규제총량제와 유사한 제도로서 감축관리를 따르는 방법이다. (총행정학개론 p 84)

[문 13] 예비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 ③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

④ 봉급, 급량비 등 예측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③.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이다(1998, 서울시 7급, 2003, 입시) 일부 수험생은 ①을 예산 완전성 원칙이 아닌 한정성원칙에 대한 예외로 출제 되었다고 한다, ①은 예비비는 한정성, 사전의결원칙의 예외 ②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 ③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예비금이라는 예비적 경비를 둘 수 있다. ④는 봉급, 재해대책비, 법정경비로서 지출할 수 있다(총행정학개론 p.893 ; p.909 15번 문제)

[문 14] 동기부여에 관한 욕구이론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 ①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친교육구
- ② 앨더퍼(Alderfer)의 성장욕구
-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
- ④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인

정답 ②. 이 문제는 동기부여이론중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을 구분하는 지혜가 요구되며 McGregor의 X이론과 Y이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②만 상위욕구와 관련되고 나머지는 하위욕구에 해당한다.(총행정학개론 p.439, 446, 461 18번 문제)

[문 15] 행정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②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 ③ 행정정보공개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제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 ④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보다는 외부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답 ②. ①은 행정처분, 행정지도, 행정예고제등을 포함한다. ②은 최근 개정된 법령으로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총행정학개론 p. 1221, 제33조 법률참조) ③은 외부통제로서 행정정보를 공개했을때에는 업무처리비용이 증가하지만 정보가 공개됨으로서 정부실패를 극복하는 통제비용은 오히려 감소시킨다. (공공선택론자들의 견해) ④는 행정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외부통제보다 내부통제를 중요시하는 추세에 있다. (총행정학개론 p.7 6번문제)

[문 16] 정책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모형은 정책문제의 발생원인을 제거, 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 도움을 준다.
- ② 정책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때 도움을 준다.

③ 정책모형의 예측능력은 모형의 타당성과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있다.

④ 정책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든다.

정답 ④ 상황판단능력을 묻는 지문이다. 수험생에게는 부담스러운 문제라고 본다. 미래예측기법이나 정책결정시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정책평가나 정책모형은

**조작화**가 일어나면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자칫 사이비(의사)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총행정학개론 p.419. 15번 문제 p.331, 333)

[문 17]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절차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이 되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④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전임기간 중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정답 ④ 시사적인 문제로서 새벽특강, 단기특강 때 강조한 문제이다. 2006년 1월부터 우리나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는 휴직 무급직으로 한다(총행정학개론 p. 787. 홈페이지 참조)

[문 18]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

②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③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④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정답 ①. 품목별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품목별예산제도는 통제중심으로서 회계책임이나 회계검사가 용이하다. 반면 성과주의예산은 관리중심으로서 예산편성과 집행상 재량행위가 확대된다. (총행정학개론 p. 940. 5,6번 문제)

[문 19] 정책집행유형에 있어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   |
|---|
| ㄱ. 정책집행자 자신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
| ㄴ.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 ㄷ.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③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이다 ㄹ은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한다. (2005. 대구시9급, 2001, 2003 행시, 2004 서울시9급, 총행정학개론 p.323-324 1번문제)

[문 20] 다음 중 전자정부의 등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과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 필요성
- ② 인력감축, 성과중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필요성
- ③ 시장실패로 인하여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 ④ 정부서비스의 수요민감성과 신속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

정답 ③. 빈번하게 출제되는 기출문제이다. 전자정부의 대두요인으로는 시장실패라기보다는 정부실패와 관련이 있다. 전자정부의 대두요인(김성태, 「전자정부와 정보체계론」; 총행정학개론 p.593)

- ① 기술결정론적 관점(공급적 측면) : 네트워크,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발달 측면에서의 관점이다.
- ② 사회결정론적 관점(수요적 측면) : ㉠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변화요인과 세계화로 인한 행정문제의 국제화에 대처, ㉡ 관료제의 한계와 행정의 분권화·지방화의 추구, ㉢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욕구증대요인, ㉣ 행정문제와 정책문제의 복잡화에 대한 대응, ㉤ 인본주의적 행정의 추구 측면에서의 관점이다.
- ③ 사회채택론적 관점(중립적인 시각) : 기술발달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술이 사회의 필요에 의해 채택될 때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 ④ 경제수단론적 관점(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한 수단적 시각) : 정부의 정보산업에 대한 선도적 수요 역할을 바탕으로 국내의 첨단정보산업의 조기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